

송하진 도지사에게서 들어보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도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25일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에 안착되면, 한국 GMA태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회복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를 만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의미와 목표, 최종선정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봤다.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선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탈피해 친환경 전기차 중심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또한, 총 3,400억원 규모의 정부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참여기업이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체질 개선 목표 접근
정부 인센티브 3400억원
미래차 산업 중심지 조성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
위탁업체 다변화하는 등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GMA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500여명의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업체를 집중화해 전기차클러스터를 조성, 전북을 대한민국의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전기차클러

스터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도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지난 해 6월 정부 공모 신청을 목전에 두고 바이톤사의 경영난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과의 위탁생산이 보류되면서 그 후속공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최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명신과 국내의 전기차 업체와 추가 위탁생산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위탁업체를 국내 1개 사와 국외 3개사로 다변화하고, 위탁생산 물량을 8만 대를 추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정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도 쉽지 않았다.

참여기업과 함께 중앙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오갔고, 구체적인 위탁 계약서와 MOU 등 근거 제시를 통해 설득시킬 수 있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5개사에 한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은 상생협약에 참여한 5개사에 한정하여 선정받았으나, 신규 투자 및 고용 등 기여가 있고, 상생협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업과 지역 부품업체간 협력방안이 있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협약내용 중 하나가 바로 수평계열화 협약이다. 수평계열화 협약을 통해 부품 협력사가 다수의 전기차 완성차와 거래해 납품단가 인하, 수급 안정화 등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지원되는 ‘스마트모빌리티 협업센터’를 통해 전기완성차 업체와 전후방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인력양성 등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최고의 상생수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자 이사회 참관,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지역공동 교섭 등 선진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실행해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성장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내달 2일부터 10일간 의정활동 돌입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3월 2일,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10일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 감사 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심의,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3일과 4일은 주요 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1일차는 최영규(익산4), 박희자(비례), 김이재(전주4), 황영석(김제1), 김철수(정읍1) 의원이, 2일차는 정호윤(전주1), 이병도(전주3), 최영일(순창), 김기영(익산3), 나기학(군산)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한 뒤, 3월 11일 제4차 분회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민중 대명절에도 가족들과의 거리두기 등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때 따른 후속 조치와 도정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선제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황의탁 도의원 “전북소방 화재 대응능력 강화해야”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군)의원이 지난 20일 발생한 덕유산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의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최초 신고접수가 된 후 12분이 지나서야 화재 진화 차량이 도착했지만, 소방용수 용량이 부족하고 인력이 낮아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장소소방에서 출동한 장비는 36분이 지나서야 도착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2020년 구천동 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면서 소방물량 차량 1대를 신규로 배정했지만, 현장에는 아직 배치되지 않아서 이번 화재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황 의원은 “전북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다면, 이번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화재 등 긴급사고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무주소방서 개칭을 앞당기고, 관련 장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탈락 원인, 전북도 대응부재”

전북도가 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서 탈락했다.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공모에 응모했으나, 지난 2월 10일 최종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드론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던 박용근 도의원은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가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구역 정도는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북도를 제외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진안군의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이라고 답변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호상 기자

“안전성 철저히 검사”... 민주, 백신 불신 차단 총력

김태년 “野, 혼란 빠트릴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
홍영표 “백신 정쟁화로 국민 불안 키워... 반국가행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백신 정쟁화’를 멈추라고 촉구하며 불신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침내 내일(26일) 우리 국민께서 기다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정쟁 대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을 향해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룬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닌 고령층 효능 표본이 적어 충분히 확인 후 접종기로 한 것”이라며 “백신 정치화는 국민 안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정

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입증한 백신”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갖겠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국민들이 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정략과 사욕에 눈먼 일부 세력이 백신 정쟁화로 국민적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회복을 가로막는 백신 정쟁화는 반(反)국가행위나 다름없다”며 “나라를 망가뜨려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 하는 세력과는 맞서 단호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마중물 되길”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선정 ‘환영’
소속 상임위서 일자리 지정·예산확보 등에 부단히 노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 당 대변인)은 25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이 유류 공장 및 실직상태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사전 1,643억원, 지정 이후 3,528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24만 대(3년간 10만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1,700여 개(3년간 직접일자리 1,106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전기차 기본구조) 개발·활용 등 공동 R&D, 사업 초기 경영안정화 지원, 공동복지기금 출연 등 근로자 복지지원, 전기차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도, 군산시와 함께 일궈낸 이번 성과가 지역의 산업체질 개선과 새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에서 군산형 일자리 지정 및 관련 예산확보에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군산 강소특구 지정을 끌어내고,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을 국회 단계에서 관철하는 등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유호상 기자

고위 당정청, 28일 추경·4차 재난지원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여결위 간사가 참석한다. /뉴시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자리한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까지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도당 “AI 살처분 비용 지자체 부담 덜어줘야”

정읍서 살처분 진행... 소요예산액 75억원으로 24억원 부담해야
“처리비 국비지원 상향 등에 대한 논의 필요... 대안 마련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비용의 지자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 고경운 대변인(정읍시의회의원)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가금농장 9곳과 체험농원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2,758만 6천 마리 닭·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6~2017년 383건의 24.2% 수준(93건)이지만, 살처분 가금 마릿수는 당시 3,787만 마리의 72.8%에 달한다. 이처럼 발생 건수는 적지만,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서 비롯됐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km로 확대하면서, AI항원이 검출되지 않는 보호지역 3km에 위치한 농장 가금류까지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되면서다.

조류독감 살처분 대상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조류독감 발생시 지자체는 보상금 10%와 매몰비용 100%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금류 농가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읍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백8십만 마리의 닭·오리의 살처분을 진행했으며, 처리비 및 보상금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75억원으로 이 중 24억원은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정읍시의 가축방역 1년 예산(71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당은 “무조건적인 살처분만이 아닌 축사 방역상태, 지리적 조건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비 국비 지원 상황과 정밀검사를 통한 조건부 살처분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